

광주시, 하남·본촌산단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정화 본격화

단기·중장기 대책 본격 추진
주거지역 확산 대비 실태조사
용산 미군기지 사례 벤치마킹
양수정화사업 등 기술 검토

광주시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광산구 하남산단과 북구 본촌산단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단기·중장기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산구, 북구 등과 함께 ‘지하수 오염대응 긴급 총괄대책 TF’를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진행, 오염 관리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 7~8월 산단·인근지역 지하수관정 187곳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 조사를 실시, 부적합 16곳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근본 해결을 위해 △주거지역 실태조사(단기) △모니터

링(지속) △오염관리(단·장기) △오염 원인 역학조사(단·중기) 등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인접 주거지역 지하수 오염범위 파악 및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산단 인근 주거지역에 신규 관측공을 설치, 오염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영산강유역청-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이미 설치된 관리공을 활용해 향후 10년간 수질모니터링(TCE, PCE 분석)을 이어간다. 오염 지하수 주거지역 등 확산 방지와 오염 저감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도 병행한다.

시는 현장실증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정화 적정방법을 도출하고 특별 조정교부금 검토, 국회·중앙부처 국비 건의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개선성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는 국비 30억원 반영을 요청해 하남·본촌산단 지역 내 오

염 원인 역학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오염된 지하수 정화를 위해 양수정화사업 등 기술을 검토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장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수정화는 지하수를 펌프나 활성탄으로 정화한 뒤 재주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적용 사례가 드물어 용산 미군기지 정화사례를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 심각성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앙부처 차원의 재정지원 및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확실한 재발방지, 적절한 정화를 위한 관리 대책을 자치구와 협의해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와 광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진행한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조사 결과 기준치 최대 466배의 발암물질(TCE·PCE)이 검출됐으나, 이를 2년 가까이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지사, 전남 행복사진전 관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도청 윤선도홀에서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 회원들이 전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주제로 촬영해 전시하고 있는 ‘2025 전남 행복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김태균 도의장 “청년 지원 강화…지역경제 활력 제고”

청년특화구역 개정안 대표발의
“도시·농촌형 특화 안정 정착”

전남지역 청년들의 창업 유도 등을 위해 조성된 청년특화구역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기존 제도가 도시와 농촌의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특화구역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명확히 구



분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도시형(5,000㎡ 이상 1만 5,000㎡ 이하)과 농촌형(10만㎡ 이상 60만㎡ 이하)의 지구 면적을 정해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들의 초기 창업비용을 낮추고,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지원을 담보했다. 농촌형의 경우 시설원에 시설·장비 구입 등 사업 지원을 규정했다.

김 의장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매

년 평균 8,000여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청년들이 전남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이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시장협의회를 통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청년 정착과 지역 유입에 주력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최선국 도의원 “목포 앞바다 영산강 쓰레기장 되풀이”

7월 집중호우 당시 1600톤 유입
기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촉구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영산강 하구둑 수문이 개방돼 목포 앞바다에 1,600톤 규모의 쓰레기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풍수해 때마다 대량의 쓰레기가 유입돼 ‘영산강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목포 앞바다 생태계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남도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영



산강 하구둑 수문이 개방되면서 초목류부터 각종 생활 폐기물까지 약 1,600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목포항으로 유입돼 항만이 마비되고 악취가 기승을 부리는 등 어민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매년 장마철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65.3%는 육상에서 발생하며, 이중 초목류를 포함한 하천 기인 쓰레기가 92%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피해를 목포와 같은 하류 연안 지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책임 원칙’이 이 같은 해양쓰레기 문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동안 국비 지원이나 지자체 협약을 통한 사후적 수거에 의존해 왔지만 이는 임시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매년 투입되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단순 수거가 아닌 원인 차단 기술 개발과 예방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AI·IoT 기반 모니터링, 스마트 차단막, 현장 처리 기술 등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바다는 어민의 삶터이자 관광객의 쉼터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목포 앞바다가 더 이상 영산강 쓰레기의 종착지가 되지 않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 도민의 삶과 해양생태계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김문수 도의원 “소멸 위기 먼 섬 선제대응 나서야”

맞춤 발전계획 등 4대전략

전남도가 소멸 위기에 처한 국토외곽 먼 섬에 대한 선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토외곽 먼 섬 특별법’에 기반한 전남도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남은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섬의 보고’이지만, 국가 해양영토의 최전선에 있는 흑산도·홍도·가거도 등 먼 섬의 경우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섬별 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 △장기 체류형 관광인구 확대 △스마트 기반시설 확충 △정정지원 기반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바탕으로 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 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산업과 관광, 스마트섬 조성 등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어업·생태자원을 연계한 장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과의

지속적인 교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 소형공항, 집안시설 보강 등 기반시설 확충과 초고속 인터넷·공공 와이파이·AI기반 스마트섬 기술 도입으로 정보 격차 해소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도 확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먼 섬 특별법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먼 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제도적 장치”라며 “지금이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과감한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근산 기자

사순문 전 전남도의원 혁신당 입당...“장흥군수 도전”

사순문 전 전남도의회 조국혁신당에 입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흥군수 도전에 나선다.

사 전 의원은 9일 입당 선언문을 통해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어야 하고 그 출발은 지방자치 개혁이어야 한다”면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줄서기 정치가 판을 치고 무능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양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기득권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능력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 경쟁으로 호남 정치의 새 시대를 장흥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리면서 “젊은 기득권 정치를 넘어 정의와 평등, 국민 모두가 존엄하게 사는 나라를 꿈꾸는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가치와 희망에 온몸으로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사 전 의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전남도의회에 당선됐으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장흥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김성 후보에 밀려 낙마했다. 정근산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